

돌아 본 2009

2 큰 별들이 지다

용서와 화해, 국민 마음속에 남기고...

2009년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했던 민주주의의 큰 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해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2월16일 선종한 데 이어, 5월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우리 곁을 떠났다. '한국의 큰 별' 셋이 석달 간격으로 잇달아 졌다.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이자 세계 정치계의 거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용서와 화해, 통합과 통일의 유지를 남기고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다'며 애도해왔던 김 전 대통령이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서거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계 평화의 큰 버팀목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충격과 허탈, 슬픔에 잠겼다. 국장기간 내내 분향소에는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100만명의 조문객이 애도했으며, 북한에서도 조문특사를 보내왔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화해와 용서, 관용'을 추구한 김 전 대통령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민주화 거목' 3인 전국 애도 행렬속 영면

영정 앞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옷깃을 여몄다. 민족의 숙원과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졌다.

그의 서거는 또 민주화세력에게도 새로운 숙제를 던져줬다. 갈등 관계에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문안 뒤 화해를 선언했고, 동교동과 상도동은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말상주 역할을 한 민주당은 DJ의 유지에 따라 야권 대통합의 깃발을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석달 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도 탓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이날 새벽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뒤편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수 많은 별명 중에

'바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며 무모하리만큼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이 사회를 '바보 신드롬'에 빠뜨렸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바보 노무현'이란 문구를 피할 수 없었고, 서거 일주일일 남도록 '정치도 바보같아야 한다'는 그의 욕성이 흘러나오면 국민은 어김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노풍의 진원지'였던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 분향소에는 '바보'를 그리워하는 '바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화마을을 찾아 슬픔을 함께 했다.

앞서 2월16일엔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

김 추기경은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서 1970~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온 몸으로 막아낸 성직자였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1월26일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 미사를 열어 6월 항쟁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그는 종교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각 영역에 목소리를 낸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

김 추기경이 선종하자 종교와 상관없이 각 계각층에서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훈훈한 미담이 이어졌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국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 추기경이 남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유행어처럼 퍼졌다. 특히 김 추기경은 선종하면서 생전에 약속한 대로 각막을 기증해 두 사람에게 빛을 선사해 국내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등 참사랑을 실천했다.

이들 3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거목이자 큰 별이었다. 이들의 서거는 '시대의 어른이 없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던졌지만 이들이 남기고 간 유지와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이 다하지 못한 남북평화와 화해·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성과 마음을 담아 동지(冬至)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주시 남구 압촌마을 전통 메주공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메주콩을 가마솥에 삶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진 유명무실한 기관 전략 우려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내일 출범

'사회통합'의 가치를 내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오는 23일 공식 출범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힌 이후 무려 4개월 만에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삼고초려 끝에 일찍부터 적임자로 거론돼 왔던 고 전 총리 영입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고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 주자로 거론되다가 2007년 1월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3년 만에 공직 무대에 다시 서게 됐다.

일단 고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의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의 의지가 실향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상당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 아닌데다 예산과 정책을 주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결국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고 전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회원로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 전 총리가 다시 양자의 길을 다시 택한 것 같다"며 "어떤 힘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어 갈 것인지도 미지수이며 현실적인 여건상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32명 가운데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

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건 위원장을 필두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김희산 전 비상기획위원장, 라종일 전 주일대사, 문정인 전 동북아시아대위원장,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포함됐다.

학계에서는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을 비롯, 김영신 경원대 신방과 교수,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이배용 대교협 회장,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선임됐다.

문화계에서는 소설가인 황석영, 이문열씨와 이원복 전 한국에니메이션학회 회장, 신달자 시인, 북거일 경제평론가 등이, 종교계에서는 법등 조계종 호계원장, 오웅진 신부 등이, 체육계에서는 이예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각각 명단에 올랐다.

/임동욱 기자tuim@kwangju.co.kr

내년부터 집에서 창업할 수 있다

중기청·지식경제부 업무보고... 中企 일자리 20만개 창출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4가지 과제를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중기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

년 1월 중에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8단계 중 5단계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32개 서류도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게 돼 창업소요 일수가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려주고 의뢰기기, 농업벤처, 문화, 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도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7조2천억원과 노점상·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 대출보증 공급분 5조6천억원, 근로자 생계비 6천억원 등 총 13조5천억원을 77만 명에게 지원한

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 마스터플랜'을 큰 그림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지정부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연료비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가를 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도 내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경 종합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과 전기요금이 오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비맥주(주)
Oriental Brewery Company

오비맥주는
지난 50년간 광주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